

여성과 환경 및 지탱가능한 발전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미국 뉴욕에 자리하고 있는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NGO 포럼의 부분으로서 제2차 세계여성환경회의(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제1차 집회는 1992년 리우에서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UNCED)에 앞서 1991년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의 성과는 "세계여성행동계획 21"(Women Action Agenda 21)을 만들어낸 것이다.

"세계여성행동계획 21"의 내용

- | | |
|---------------------|--------------|
| • 민주적 권리 | • 인구정책과 건강 |
| • 환경윤리 및 시행의무 | • 외채와 무역 |
| • 생물의 종다양성 보존과 생물공학 | • 소비와 여성 |
| • 핵발전과 대체에너지 | • 빈곤문제 |
| • 군사문제 | • 토지소유권 |
| • 여성의 권리 | • 식량안정과 신용대부 |

"세계여성행동계획 21"의 전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 | |
|-----------------|------------------------|
| • 건강하고 지탱가능한 지구 | • 토착민과 토지소유권, 문화, 관습존중 |
| • 세계평화 | • 모든 종의 보존 |
| • 인권존중 | • 인간의 기본권리(깨끗한 공기와 물, |
| • 참여민주주의 | 식품, 주거, 건강, 교육, 개인의 자 |
| • 자결권 | 유와 정보에 대한 자유) |

이상과 같은 비전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여성의 권리부여(EMPOWERMENT)에 대한 결단 촉구이다. 여성에게 권리부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형평성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태계와의 조화모색의 중심적이며 역동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문에서는 여성이 환경운동의 촉매자이며 주동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이 지구운명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에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리우 지구정상회의와 '92 NGO 지구환경회의에 제출된 바 극히 일부만이 양 회의의 협약에 반영되었다.

제2차 세계여성환경회의는 1995년 9월 1일 ~ 3일까지 북경회의의 NGO 포럼과 같은 장소에 설치될 여성과 환경장막(Tent)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WEDO의 회원은 물론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1만여명의 여성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채택된 여성행동계획 21과 리우회의의 공식 의제 21(Agenda 21)의 실천현황을 살피며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21세기의 주요현안이자 인류의 앞날이 걸려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이처럼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인지 금번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1차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의의 3대 주제의 하나인 발전문제의 검토에 있어 지탱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에서 환경적인 접근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도 정부대표단과 NGO참가팀의 각각의 회의참가 준비내용과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두 집단의 성격의 차이로 인한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 관한 시각마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

오늘의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국제안전보장과 세계경제문제와 나란히 국제정치의 3대 현안의 하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지구환경의 문제가 국제정치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의 일이다. 유엔은 그로부터 20년후인 1992년 리우에서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리워지는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후 2년 동안에도 지난 6월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1994 지구환경회의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자칫 인류는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

110여개 국가의 정상들을 비롯해 3만명 이상의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그리고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세계언론이 총집중된 가운데 열렸던 리우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의 12일 간의 회의기간에도

- 4억5천6백만 파운드의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고
- 3백만명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 6억7천2백만톤의 탄산가스와
- 1백68만대의 차량이 반출되었고
- 1만8천톤의 염화불화탄소가 방출되고
- 2천1백60평방마일의 산림이 사라지고
- 31만2천명의 어린이가 기아 등으로 사망
- 14만4천 배럴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고
- 3백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

이 현상은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추구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잘못된 생활양식에 의한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인간중심적이며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온 서구적인 사고와 강자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현대화라는 이름의 선진국 추종형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환경의 위기상황을 가중 그리고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되는 것은 동서, 남북을 포함한 세계가 오늘의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그 해결책과 시행대책 모색에 있어서의 합의도출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국가간의, 집단간의 그리고 남북간의 이해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예: 개도국의 인구증가문제와 선진국의 소비태도 문제 사이의 논쟁

현 세계인구 56억6천만명

2050년 1백억명(1.6%증가를 유지시) 1백25억명(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증가율의 93%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

아시아 1950년대 세계인구의 55%

1993년에 60% 예상

20%의 세계인구(선진국)가 80%의 지구자원 소모

| 미국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중국의 12배, 이디오피아의 4백22배

| 6%의 세계인구가 40%의 자원소모

| 리우회의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생활양식은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함

리우에서 남측의 주장은 지난 수십년간의 북의 주도하에 추진한 개발이 제3세계에 남긴 것은 천연자원과 금융자원을 대거 제1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반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막대한 채무와 환경파괴 그리고 심각한 빈곤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측의 현행 개발구조와 체제가 긴급히 재조정되어야 하며 제3세계의 선진국 추증형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우에서의 남측의 요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문제였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주장은 기득권(생활양식 포함) 포기를 거부하고 초대국 의식에 출발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경제성 없는 환경보전 지원을 위한 재정과 기술은 없다고 강변한다. 다국적 기업의 리우에서의 위세당당함도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의 국제정치, 경제구조 및 체제에 의해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간의, 국가간의 격차가 도처에서 대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열쇠가 당장의 편이를 선호하게 마련인 유권자를 의식하여 단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이윤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주어져 있다고 있다.

강대국과 강자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와 체제 속에서 지구환경의 보전과 복구작업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유엔환경기구(UNEP)의 사무총장인 모스타파 톨바가 "브라질회의가 인류의 생존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그 회의에서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핵심문제들이 의제에서 조차 배제된 사실에서 오늘의 환경문제에 관련한 국제정치의 교착상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배제된 의제들은 다국적 기업의 문제, 인구문제, 빈곤문제, 소비태도문제, 군사문제, 화석 연료사용문제, 핵문제, 의제 21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강제규정, 재정 그리고 목표와 일정 설정 문제들이다.

그래서 리우회의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리우의 '92지구환경회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리우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략

한 지구정상회의의 '리우선언문'과 '의제 21'의 내용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지구헌장'과 '의제 21'을 마련하여 서명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제정된 단체협약에는 지구정상회의에서 배제된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나라의 NGO들은 이 협약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해결의 길은 없는가?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환경정치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는 일에서도 세계는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민간단체가 만들어내는 국제적인 압력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하나 남은 길로서 민간의 참여중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배제된 핵심의제들이 바로 여성행동계획 21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여성의 환경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행동계획 21의 내용이 지구정상회의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걸려있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간단체의 강점은 국경, 계층, 계급, 피부색, 종교 등의 일체의 벽을 넘어서 연대하고, 주장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국가이익에 매임없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동양권에 속한 우리들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혜로 다스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어 더불어 사는 삶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데 또 하나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구환경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특수 자산을 크게 살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오는 10월 21일 23일까지 열리는 일본에서의 준비회의에서부터 시도해야 함).

유엔과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유엔의 중요한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에 관해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제휴하는 일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1천4백20개의 단체가 참여했던 1992년도 리우에서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시작해서 1993년도의 유엔 인권회의와 1994년도의 인구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1996년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릴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그리고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도 민간단체의 참여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 발휘의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국제적 협상력 조직과 영향력 발휘는 WEDO가 선두에서 하고 있다. 86개국의 가맹국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의 10명의 공동대표중에는 아시아권에서 인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극동아시아의 참여가 없는 점이 아쉽다. GNP와 교역량이 각각 세계의 15위와 12위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국제화 수준이 방콕과 마닐라에도 뒤지는 46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의 국제 진출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장을 여성들이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생명의 담지자이기도 한 여성이라는 점이다. 오늘의 지구환경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남성들이 했다. 그것도 서구의 그리고 강들에 의해서이다. 여성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 쓰여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이고 령기에 바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이 될 수 있다. 남성에게만 더이상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여를 대안으로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지금까지의 지구를 살리는 논의나 실행에 있어서 반대가 아니면 무관심의 입장을 취해 온 것은 남성주도의 정부나 기업이었다. 반면 시민으로 구성된 환

운동의 주동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악화된 환경의 피해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는 약자인 여성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지구환경문제의 관리자와 해결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여성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결의기구에 전달하느냐 하는 것마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WEDO의 보고에 의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월 6일에서 10일까지 마련한 발전문제에 관한 국제청문회에 초청된 33명의 전문가 가운데에는 여성이 불과 7명이었으며 WEDO의 공동의장이며 아프리카의 그린벨트 운동가인 왕가이 마타이 한사람만이 민간단체 참가자였다는 것이다. 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1992년 리우회의의 1백78명 정식대표 중에는 여성이 10명도 되지 못했다.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동등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유엔회의 자체에서조차 여성의 참여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유엔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유엔의 정책중에서 환경문제와 인구문제의 예를 들면 유엔은 여성을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들기 위한 혜택(교육, 건강, 경제참여 등)의 수혜자로 아니면 청소년과 토착민과 같이 약자로 묶어 피보호자로서의 수동적인 위치에 묶어두고 있는 점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가 유엔의 의식에 정식으로 도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의 여성들은 지금 1995년도에 북경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로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 여성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미 마련된 세계여성의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관심분야의 순위조정 (예: 원안의 ①의사결정 및 권한배분에서의 참여 불평등이 수정안의 ①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가중)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을 성취해내는 획기적인 전략모색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략은 여성이 능동적으로 확보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의회의 진출을 기준으로 평가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1993년도 국제의회연맹이 1백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백42위를 기록하고 있어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6년이면 OECD(경제협력개발회의)에 가입을 계획하리 만큼 경제대국의 대열에 서있으며 유엔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위상답게 앞으로는 모든 회의에서 공헌을 해야 한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국제회의 이외에도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여성의 지도력하에 국제여성회의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중의 하나가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협의 자격을 가진 단체의 하나인 세계 YWCA대회이고 또 하나는 북경회의의 NGO 포럼을 위한 세계여성지도자회의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여성회의가 세계여성의 집단적인 요구를 결의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문제는 어떤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

다. 분명한 것은 통념에 입각한 통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되풀이하거나 또 하나의 것을 보태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1995년에는 유엔이 기구개편을 예정하고 있어서 세계여성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변혁을 성취해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세계여성의 관심분야는 행동강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평화, 환경 등과 관련된 국제정치의 교착상태를 풀어내는 일 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 그러나 그들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여성의 권한배분(EMPOWERMENT)의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여성들의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

오늘의 세계는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반면 유엔기구, 민간단체,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힘이 커지는 추세에 있다. 세계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각국의 특수사정을 극복하고 힘을 합친다면 여성 차별과 환경수탈의 장벽을 무너뜨릴 상상 밖의 힘이 생기고도 남을 것이다. 이 두 장벽의 뿌리는 하나이다. 그것은 자연정복이 약자정복으로 이어지며 약자인 여성은 정복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경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유엔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한 이래 20년 동안 여성문제에 뚜렷한 진전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은 “어떻게 ‘불가능’을 성취해내는가”하는 것이다.

한국 NGO 포럼준비위원회에게의 제언:

①여성의 EMPOWERMENT의 전략 집중논의

②여성의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세계여성 성명서 작성 및 서명운동 전개(모든 회의에서)

③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마련위한 운동전개(환경을 위해 환경규제를 만들듯이)등

④이상과 같은 활동을 북경회의에서 전개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지원을 얻어낼 것